공론과 국시

아! 조정은 전하의 조정이며, 관직과 작위는 국가의 공기(公器)[1] 입니다. 마땅히 공론(公論)[2]으로서 한때의 인재를 모두 등용해야 하는데, 심의겸과 김효원 두 사람에 대한 시비의 분별이 무슨 큰 관계가 있어서 이것으로 거조(擧措)[3]를 정합니까?

하물며 국시(國是)를 정하는 데는 더욱 말로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인심이 함께 그렇다고 하는 것을 공론이라 말하고, 공론이 있는 곳은 국시라고 합니다. 국시라는 것은 한 나라의 사람들이 의논하지 않고도 함께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익으로 유혹하는 것도 아니며 위협으로 두렵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삼척동자(三尺童子)도 그

1 공기(公器): 국가의 관직 따위를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쓰는 말
2 공론(公論): 공통된 또는 공정한 여론
3 거조(擧措):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한 조치. 원문은 거착(擧錯)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擧措의 착오로 보인다.

옳은 것을 아는 것이 국시입니다.

지금의 이른바 국시라는 것은 이와 다릅니다. 단지 논쟁을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해도, 듣는 자가 혹 따르기도 하고 혹 어기기도 하며, 어리석은 남자나 여자도 모두 반은 옳다 하고 반은 그르다 하여 끝내 일치될 기약이 없습니다. 어찌 집집마다 타일러 억지로 정하겠습니까? 남의 의심만 더하여 도리어 화(禍)의 실마리를 내는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은 사류의 뜻이 모두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 깊은 식견과 원대한 생각이 있는 선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논의에 압박을 받아 스스로 주장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리저리 어지러운 사론(士論)[4]이 어느 때나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해설

이 글은 공론(公論)과 국시(國是)에 대한 선생의 견해로서 사상사나 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어이다. 정치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국시에 대한 논쟁이 자주 있음을 볼 수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라고 할라치면 과거 보수적 성격을 띤 정치가는 어김없이 임명

4 사론(士論): 선비들의 공론

대상자에게 우리나라의 국시가 뭐냐고 따지듯이 물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시가 무엇일까? 선생의 정의에 따르면 삼척동자도 옳다고 해야 하는 것이니, 지금의 우리나라 형편으로 보아 국시를 정한다는 것은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정치적 입장 또는 경제적 지위에 따라 각자가 내세우는 것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반공(反共)을 국시로 정한 이후, 무려 반세기가 넘게 그것을 국시로 알아 남북분단과 그에 따른 남북의 대결과 갈등을 당연한 일로 아는 국민들이 많았다. 그래서 반공이 국시라는 말이 실제로 먹히기도 했고 지금도 일부 나이 든 사람들과 세력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을 국시처럼 사용하기도 한다. 자유와 민주주의가 갖는 말 그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 또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자유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자유에 불과하고, 민주주의 자체도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민의가 그대로 정치에 반영된다고 보기에는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어떻든 간에 이 국시라는 말을 역대 정권에서 자신들의 정권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이념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선생이 지적한 것처럼 현재 우리에게 절실한 국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필자는 그 가운데 하나를 남북평화통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국시는 항상 공론을 등에 업고 가야 한다. 바로 여기서 공론의 개념이 등장한다. 선생은 '인심이 함께 그렇다'고 여기는 것을 공론이라고 보았다. 인심이란 오늘날은 보통 시민들의 마음이다.

그렇다면 요즘 언론이 과연 공론을 제대로 반영하는가? 혹시 언론사의 이익을 위해 공론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가? 언론사는 공론보다 광고주의 눈치를 본다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은 웬만큼 다 안다. 다만 공론을 가장하여 광고주에게 도움 되는 보도를 일삼고 있을 뿐이다. 물론 매사에 그렇다는 말은 아니다. 중요한 고비나 선택을 해야 할 때 그렇다는 뜻이다.

게다가 광고 물량을 더 확보하려면 시청률이나 구독률을 올려야 하는데, 그 방법이 치졸하다. 바로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편파적인 보도, 심지어 가짜뉴스까지 남발한다. 남의 사생활이나 인권침해 따위에 큰 관심이 없고, 그걸 지적받으면 어물쩍 넘어가거나 면피성 언급으로 넘어갈 뿐이다. 공론이 언론사의 이익에 반할 때는 가볍게 때로는 괴상한 논리와 수사법으로 교묘하게 무시될 뿐이다.

이런 것이 이른바 국시여야 한다는 자유민주주의의 실상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고, 그 마저도 가난한 사람부터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 예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한문 원전 음미하기

人心之所同然者를 謂之公論이요, 公論之所在를 謂之國是라.
인 심 지 소 동 연 자 위 지 공 론 공 론 지 소 재 위 지 국 시

國是者는 一國之人이 不謨而同是者也라.
국 시 자 일 국 지 인 불 모 이 동 시 자 야

» 어휘 풀이

人心: 사람의 마음/之: 어조사/所: ~하는 것/同: 같다/然: 그러하다/者: ~것/謂: 말하다. 일컫다/之: 그/公論: 공통된 또는 공정한 여론/在: 있다/一: 하나/不: ~하지 아니하다/而: 어조사로서 접속사/是: 옳다/也: 어조사

» 문장 구조

1. 크게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글이다. 뒤의 문장이 앞의 문장에 등장한 國是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
2. '人心之所同然者, 謂之公論, 公論之所在, 謂之國是'는 두 개의 문장이 병렬된 구조로 문장 구조는 비슷하며, 각각 公論과 國是를 정의하고 있다.
3. '人心之所同然者, 謂之公論'의 원래 문장은 '謂人心之所同然者公論'인데, 주어는 일반인으로서 생략되어 있고 동사는 謂이다. 그러니까 주어+동사+목적어+목적격보어의 영어 5형식과 유사한 문장이다. 人心之所同然者는 목적어로서 명사구이고 공론은 목적격보어로서 명사이다. 그런데 여기서 人心之所同然者를 강조하기 위해 앞으로 빼고, 그 자리에 대명사로서 之를 넣었다. ~者는 주어나 목적어를 만들기 위해 명사구를 만드는 방법으로 문맥에 따라 '~하는 것' 또는 '~하는 사람'으로 해석한다.
4. '公論之所在, 謂之國是'도 앞의 설명과 유사하다. 원래의 문장은 '謂公論之所在國是'의 주어+동사+목적어+목적격보어의 형태로 주어는 일반인으로 생략되어 있고 謂가 동사이며 公論之所在가 목적어이고 國是가 보어이다. 公論之所在를 강조하가 위해 앞으로 빼다보니 그 자리에 대명사 之가 들어갔다. 다만 所在에서 所는 所+동사의 형태로 영어 to+동사처럼 사용되어

여기서는 명사구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하는 바' 또는 '~하는 것'으로 번역한다.

5. '國是者, 一國之人, 不謀而同是者也'의 문장 구조는 國是者가 주어이고, '一國之人, 不謀而同是者'가 술어로서 명사구이며, 끝의 也가 be동사의 역할을 하는 2형식의 문장이다. 이 명사구에서는 一國之人이 구 안의 의미상의 주어이고 不謀而同是가 술어이며 者는 명사구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6. 國是者의 者는 不謀而同是者의 者와 달리 명사구를 만드는 말이 아니라 구 가운데 사용되어 제시와 정지를 나타내는 어기사(語氣詞) 역할을 하기 위함인데 굳이 번역할 필요가 없다.

» 해석

인심이 함께 그렇다고 하는 것을 공론(公論)이라 말하고, 공론이 있는 곳은 국시라고 한다. 국시라는 것은 한 나라의 사람들이 의논하지 않고도 함께 옳다고 하는 것이다.